

시론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모처럼 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광주·전남·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로 호남 에너지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전북을 아울러서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만들자고 한다. 인구 500만의 광역경제권 협력공동체를 제안한 것이다.

신선하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다. 시대 추세와 정부 정책에도 딱 맞다. 송갑석 국회의원이 수개월 전부터 광주·전남·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을 두루 만나 제안해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지스트 연구자들도 이 구상에 밀반점을 했는데 지역과 학 썩크랭크 과기원다운 역할을 했다.

지난주 이 구상이 언론에 소개되자, 지역 여론의 반응이 좋다. 오랜 만에 집권당이 좋은 정책을 냈다는

평이다. 이제 민주당 시도당은 광주·전남·전북 지자체장들과 한국전력 등에 호남에너지공동체를 함께 추진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사업구상 실현을 위한 용역을 맡겨 타당성과 실현가능한 방안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민들은 지난 몇 달간 정말 짜증이 났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시도통합,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서로 엇박자만 내는 꼴을 보며 걱정도 하고 지겹기도 했다.

말로는 항상 상생발전을 내세우면서 시장 도지사는 여론을 핑계 삼아 진지한 상호토론과 협의도 없이 자기 입장만 내놓고 싸우다 보니 지역미래가 암담하던 차에 나온 호남경제공동체구상은 지역민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10월20일자 광주매일신문 시론에서 '광주·전남·전북 광역경제협력 메가시티부터 만들자'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잘 안되는 행정통합보다는 공통분모인 광역경제협력 메가시티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행정통합으로 가자는 제안이었다.

이번 송갑석의원과 광주·전남·전북 민주당의 사업구상은 이런 필자의 생각에 완전히 일치한다. 또 광주·전남이 서로 갈등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매우 시의적절한 돌과 방아이다. 그간 전북도가 호남공동체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북도까지 공감하고 공동추진한다는 점에서 호남공동체복원이라는 또 의미 깊게 다가온다.

주요 이슈로 내세운 에너지공동체구상은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미국 바이든 정부 등장과 함께 저탄소 국제무역질서 강화, RE100 등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흐름에 정확히 부합하기도 한다. 그래서 실현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호남에너지공동체 사업구상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이 사업구상 성공을 위해 지역과 정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

먼저 모처럼의 혁신적인 구상에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기업, 대학, 시민사회와 언론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사업성공을 위해 뛰는 호

남광역에너지공동체회의 구성을 당부드린다.

둘째 부울경 광역경제메가시티대구·경북행정통합, 세종충청경제권통합 등에 맞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호남경제권공동체 추진을 성공시켜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 그리고 이들 네 개 광역경제공동체가 상호협력해 중앙정부에 분권과 균형 예산과 제도화를 요구하는 연대를 하기 바란다. 이번에도 못하면 수도권 지방간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셋째로 그간 균형발전정책 성과에 미흡했던 문재인정부가 호남에너지공동체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전이 에너지고속도로를 깔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단지가 서남해안 일대에 만들어지며, 관련된 기업들이 연결되어 기업도시로 형성되는 정책을 성공시키게 되면 호남경제공동체가 동북아의 새로운 혁신성장을 리스터로 발전해 우리는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다.

때는 바야흐로 대선이고 지역발전의 호기를 놓치지 말자.

호남에너지 광역경제공동체를 성공시키자

기고



최영태
前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

글을 읽고 쓰며 계산을 하는 능력은 한 인간이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초적인 자산이다. 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OECD가 발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학생들의 읽기·수학·과학분야 성적과 글로벌 역량은 OECD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읽기·수학·과학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2009년 6.7%에서 2018년 14.8%로 급증했다.

가정환경이 하위 20%인 학생의 읽기 최하위 등급비율은 더욱 떨어져 2012년 13%에서 2018년 25%로 증가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소득 간 학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꼴찌도 행복한 나라’. 독일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킨 박성숙씨가 독일 교육을 소개하면서 쓴 책 제목

이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에서 독일 교육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경우는 학교에서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생각이 이미 1970년대 독일 교육개혁의 기본원리가 되었습니 다”라고 서술했다. 당연히 독일 교육은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꼴찌도 행복한 나라’이고 ‘경쟁이 없다’라고 소개된 독일 교육에 유급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독일 아이들이 학년 말에 받아보는 성적표는 등급이 1-6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등수 없는 성적표’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중 5-6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유급 대상이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유급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이를 받아들인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주가 초등학교부터 유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핀란드에도 유급제도는 있다. 이들 나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유급에 앞서 방과 후

혹은 방학 동안에 보완교육을 실시한다. 그러고도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 유급을 시킨다.

학생을 평가하는 가장 큰 목표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과정을 안내하고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주제적으로 공부를 할 자세와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독일이나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대개는 우수학생이 아니라 중간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대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일반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이들은 ‘모두 함께 가는 교육’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유급제도가 없다. 동시에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다. 읽기와 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이 부진한 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를 받아들이는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주가 초등학교부터 유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핀란드에도 유급제도는 있다. 이들 나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유급에 앞서 방과 후

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신중 문맹자가 양산될 것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구호가 공허하게 다가올 뿐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월5일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해 ‘코로나19 교육격차’에 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서울시 교육청만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라는 특정한 조건에 한정시킨 시한부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코로나19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아 비율 증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학력보장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

다른 나라 교육제도와와의 비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꼴찌도 행복한’ 교육제도로 큰 부러움을 사고 있는 독일 초·중등학교에 유급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교육이 그만큼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기초학력은 보편복지와 교육운동의 출발점이다. 기초학력은 어떤 형태로든 공공교육이 책임져주어야 한다.

성적부진 학생과 독일의 유급제도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공사장 화재 예방 시작과 끝은 안전수칙 준수

해마다 공사장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는 화기 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무자격자 용접작업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이 무엇인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용접·용단 작업 시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또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해 물통·불꽃받이를 비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공사현장 관계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면적별 해당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으로 발생하는 불꽃은 수



산방지포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가연성·폭발성 가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소 결핍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용접작사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은 밀폐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용접 작업 후에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화재 예방은 소방당국의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장 관계자의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기본 안전수칙 준수 만으로도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정찬영·영양소방서 심호119안전센터 소방장〉

애완견 안고 운전하는 습관 버려야

최근 시대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와 함께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애완견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어딜 가는 데리고 다니는데 특히 차량에 애완동물을 태우고 이동하는 운전자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 차량 운행 중에 애완동물 안고 운전하는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운전자라면 누구나 흔하 불수 있는 광경이다. 마침 신호대기 중에 상대 차량을 보게 되었는데 운전자에게 안겨 있던 애완동물이 조금 열린 창문에 머리를 들이대며 밖을 내다보려고 운전자의 몸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을 보았다.

운전하는 당사자는 그런 행위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걸 바라보는 필자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스럽게 느껴졌다.

실제로 애완동물이 운전자 진행 방향 사이를 가려버려 결국 사고로 이

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 승차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5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모은 운전할 때에는 애완동물 안전벨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애완견이 사람들과 교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하므로 애완동물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애완동물 안전벨트를 채워주거나 애완동물 가방에 넣어 단단히 고정하고 운전자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올바른 운전습관을 기대해 본다.

〈박대영〉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이해관계 얹힌 광주문화관 산으로 갈 판

우여곡절 끝에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도 협력을 예정하고 있다. 다른 아닌 광주문화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문학인들의 이해관계에 얹혀 ‘사공마는 배가 산으로 갈’ 판이라는 우스갯 소리마저 들린다.

최근 두 차례 열린 전시설계콘텐츠위원회 회의의 경우, 그 적나라한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소위는 전시설계 추진 방향, 전시설(상설·기획) 구성 콘텐츠, 문학관 명칭 및 전시실 외 공간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각 위원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알맹이 없는 회의로 전락했다.

이미 선정을 마친 각학동 시화마을 부지 등 다뤄야 할 안건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더 참여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위원 구성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진 바,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년 넘게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광주문학관이 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앞서 지난 1996년 건립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무산됐으며 2009년엔 1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용 처리됐다. 2013년에는 부지 선정 난항이다.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진다면 유명 문학관 신세를 면치 못할 공산이 크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8년여 만에 재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171억원을 들여 북구 시화문화마을에 건축 연면적 2천730여㎡,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 완공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갈등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문학관을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통으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의 전례를 답습할 소지가 농후해 보인다.

지금 세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현재로선 난항이다.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진다면 유명 문학관 신세를 면치 못할 공산이 크다.

광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문학관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문학’이라는 명성에서 보듯 지역 기반이 뒤지지 않을 뿐더러 시민들의 욕구도 충만한 현실과는 사뭇 다르지만 하다.

문학계 인사들이 가득권을 내려놓고 광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의기투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격화된 일곡공원 매립 폐기물 정밀조사

광주 일곡제2, 3근린공원 매립폐기물에 대해 정밀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반 관리를 제3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법률지원팀), 환경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일곡근린공원 매립폐기물 조치계획’에 따른 것이다.

일곡 폐기물은 지난 2018년 11월 제3근린공원 내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터파기 공사 중 지하 4~11m 지점에서 대규모 쓰레기층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2·3근린공원 지층은 총 14만2천t 정도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처리비용은 최소 600억원에 이른다.

지난 1989년 생활폐기물 매립장인 일곡동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운영동 위생매립장으로 옮겨졌어야 할 쓰레기가 1994년 불법으로 재매립됐다.

광주시는 12월30일 한국환경공단과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정밀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조사는 매립폐기물의 상태 및 분해 안

정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 ‘사후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추진 일정은 2월까지 자문단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과업계획서를 확정하고, 3월에 조사 업체 선정, 매립지 상태조사 및 침출수, 지하수 등 4개월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매립지 상태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조치명령)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시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 매립된 쓰레기의 실태를 확실하게 규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필요하다면 폐기물 매립 주체에 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

주민들은 인구 3만명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에 7m 가량의 거대한 쓰레기 산이 발견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건강과 안전 문제 등 흑시나 모를 불안감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제3의 전문기관 정밀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 신성장동력 ‘인구절벽’ 해법되나

취재수첩



임채만

(지역특집부 부장대우)

전남 22개 시·군이 신축년 새해설계를 발표하면서 저마다 청사진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인구절벽이라는 시급한 현안에 직면한 전남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급감하는 인구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백악이 무효’라는 국내 인구문제에 있어 전남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연구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지방소멸 위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 오래다.

중앙정부의 지원 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각자도생하기 위한 지자체의 해안이 필요할 때다. 이런 이유로 전남 각 지자체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발전·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안을 내놓고 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朴俊洙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李庚秀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문의 650-2072	광고문의 650-2017	
	경제부 650-2050	사건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시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